

[종합·해설]

범여 후보단일화 각당 입장

“결국 민심이 판가름… 지지율 높여라”

신당 “지지율 압도 주도권 잡았다”**민주 “신당과 통합은 있을수 없다”****문국현 “선명성 부각 차별화 주력”**

차례 공표한 바 있다.

◇민주당=일단 민주당도 후보단일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부벨트 연합의 효과로 조만간 이인제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후보단일화는 민주당 후보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신당 후보는 참여정부 국정 실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국민적 지지를 모으기 힘들고 진보 성향의 문국현 후보도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민주당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범여권 원자 대통합론’에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념적 기반이나 다른 정당들이 대선을 앞두고 모인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이합집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친노 세력이 건재한 민주신당과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도 이미 후보단일화는 가능하지만 당내 통합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민주당이 대선보다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창조한국당(가칭)=창조한국당의 내달 4일 창당을 통한 조직 확대와 문국현 후보의 지지를 제고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후보단일화 시기도 최대한 늦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측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이 높아갈 것이며 내달 중반에는 20%대를 돌파하면서 후보단일화 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또한, 정동영 후보와 이인제 후보와의 차별화를 강화하면서 개혁적 색채를 강화하는 한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을 통해 대항마로서의 선명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국현 후보 측은 ‘범여권 원자 대통합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다만, ‘정치연합’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그러나 정치적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는 문 후보 측이 대선 직전 범여권 정당과의 합당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선 전초전… 후보검증 공방될 듯

오늘부터 17대 국회 마지막 국감

한나라당은 16일 대통령민주신당의 물리력을 동원한 정무위 국감증인 강행 체택 사태 책임을 물어 거부해 온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예정된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정책에 초점을 맞춰 지기보다는 대선 전초전 성격의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된다.

◇신당 “이명박 국감 될 것”=이번 국감은 ‘이명박 국감’으로 치른다는 목표 아래 이 후보의 주요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신당은 우선 상임위원회로 이 후보 공약에 대한 정책 검증에 나서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성과 환경성, 실현 가능성 등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또 이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은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부활시키고 교육 및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 후보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 삼안동 DMC 건설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BBK 주가조작 사건과 도곡동 땅 차명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실시를 관철시킨다는 목표다.

또 AIG 외국부유출의혹, 천호동 뉴타운 특혜의혹 사건 등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상임위원회로

증인 및 참고인을 불러 추궁하는 등 도덕성 및 자질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한나라, “맞불작전 펼 것”=참여정부의 권력형 비리 규명과 범여권 유력후보에 대한 철저 검증에 국감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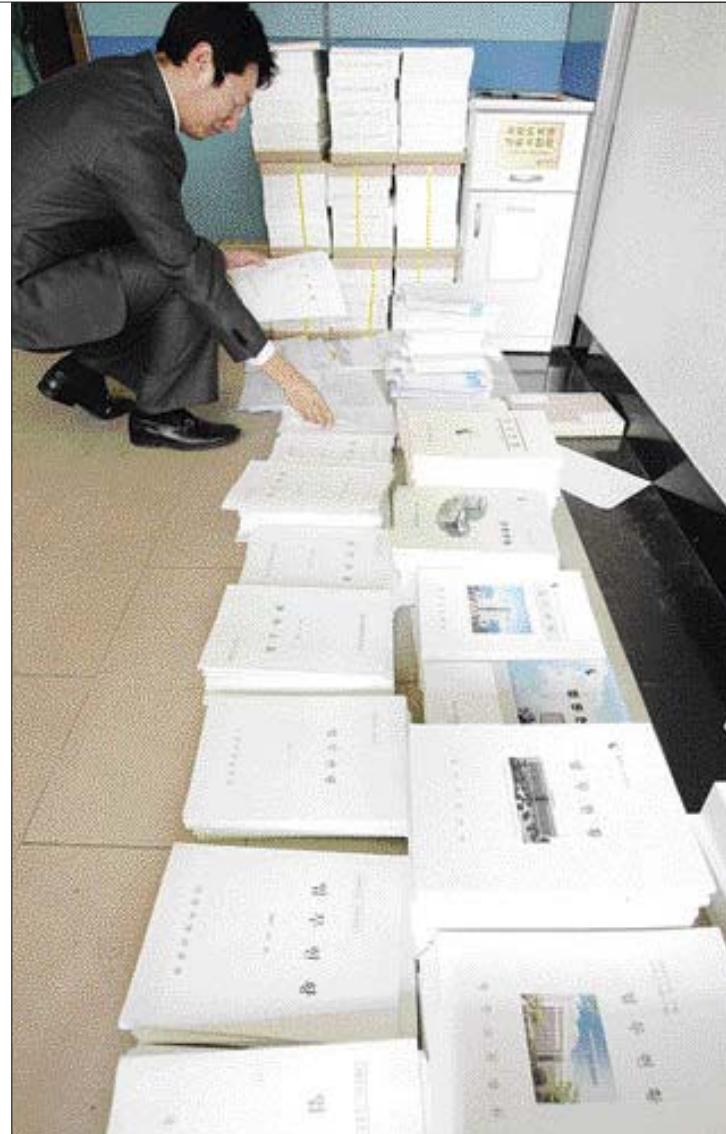
정운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부산 지역 건설업자 비호 의혹, 변양근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정권 차원의 종체적 비리 내지는 정권 실세들의 도덕적 해이 등에 따른 것임을 국민 앞에 펼쳐 드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의혹 ▲자양동 ‘스타시티’ 부지 특혜분양 의혹 ▲2003년 한화그룹의 비자금 제공설 등 소관 상임위별로 철저히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범여권 유력후보 검증과 관련해선 일단 신당의 정동영 후보에 대해 회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미 당내에는 ‘정동영 조사팀’이 설치돼 정 후보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놓고 있는 상태.

◇민노·민주 국감전략=민주노동당은 국감에서 ▲한미FTA로 인한 민생경제 파탄과 사회양극화 심화 문제 ▲아랜드 등 비정규직 사업장 문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사회양극화 심화 원인 등을 파헤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의 주요정책 검증’을 대표 기조로 한미FTA 문제점,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짚어보는 동시에 신당의 이 후보 검증 작업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백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07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조사관이 국정감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몸 낮춘 정동영

경선 갈등 봉합될까

“아교풀 되겠다” 당화합 나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정동영 후보는 16일 경선 갈등의 양금을 씻기 위해 화합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신당 의원총회에서 참석, 오종일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김원기, 문희상, 정세균 상임고문 등 소속 의원 모두와 악수를 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정 후보는 의총에서 “오늘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출발점”이라며 “141명 국회의원 모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동영은 아교풀 역할을 하겠다. 12월에 승리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두 후보

와 응원하신 의원 모두 극진히 잘 모시고 반드시 당을 하나의 용광로로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또 이날 소속 의원 141명 전원에게 전화를 걸어 결속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가 이처럼 경선이 끝나고 동시에 당화합에 나선 것은 당 내부의 분위기가 아직도 불안정해 보이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반 정동영 기류가 여전하고 외부적으로는 문국현 후보의 부상 속에서 당내 세력의 이탈이 우려되는 것이다. 정 후보 측은 특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전례에서 보듯 ‘점령군’처럼 당 장악을 시도할 경우 내부의 저항을 불러 ‘이탈’의 명

분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정 후보 측은 최대한 몸을 낮추면서 ‘포옹’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 측근인사들이 스스로 ‘백의종군’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해심 측근은 “어제 저녁 캠프 사람들이 모여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일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당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당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화합 행보에 이어 조만간 소학규 전 경기지사와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의할 예정이다. 정 후보 측은 또 경선 과정에서 두 후보 측에 제기했던 9번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 후보 측의 당화합 시도가 기대만큼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세력의 이해가 혼재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신당 의원총회는 총 141명 가운데 7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전 총리 측에서는 상황본부장을 맡았던 선별련 의원과 대변인을 맡았던 김형주 의원만 눈에 띄었다. 친노진영에선 유시민, 한명숙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이 불참했다. 또 순 전 지사 측에서도 우상호·김영주·한광원 의원 등만 참석하고 김부겸·정봉주·송영길 의원 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백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盧대통령과 관계복원도 시동

지명 직후 전화 ‘당선 신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그간 소원한 관계를 보였던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2002년 민주당 경선에 함께 참여했던 두 사람은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과 여당 의장 또는 통일부 장관의 관계로 끊지 않은 기간 ‘정치적 운명’을 같이 했지만 4월 27일 회동에서 ‘정치적 결별’을 한 뒤 5개월여간 ‘냉각기’를 가졌다.

정 후보는 15일 당선자로 지명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협력을 얻고 싶다. 감사전화를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찾아뵐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힌 뒤 곧이어 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 신고’를 했다.

두 사람의 직접 접촉은 지난 4월 말 결별 회동 후 5개월여만으로, 열린우리당의 존폐와 범여권 통합 문제를 둘러싼 이전으로 노 대통령과 갈라선 뒤 비노(非盧) 진영의 선봉으로 ‘변신’한 정 후보가 관계 개

선에 적극 나선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그간 ‘메신저’를 통해 관계 회복을 위한 양측간 사전정지 작업이 일부 진행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 후보는 1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정 후보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껴안고 당내 수습을 잘 하라”는 전날 노 대통령의 ‘빼았던 지적’에 대해 “실천할 생각”이라고 겸허히 받아들였다. 그러면 서 “노 대통령과는 통합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이 달랐다. 열린우리당 의장을 2번이나 지낸 사람이 탈당, 신당을 만드는데 앞장선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대단히 미안하다”며 ‘사과’의 뜻도 내비쳤다. 또 “시간이 되면 (노 대통령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당 경선 과정에서 끊임없는 ‘노심’(盧心) 논란이 일었을 정도로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대선경선의 상수로서 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연합뉴스

가장 역동적인 나주와의 만남